

7/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박철희



박철희(朴喆熙) 1963년생.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일본연구소 소장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Columbia)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조교수,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 미국 컬럼비아대학,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고베(神戸)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에 『代議士のつくられ方』(2000),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2011), *National Identities and Bilateral Relations*(공저, 2013) 등이 있다.

1. 문제 제기

한일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래 양국 간 협력과 갈등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해왔다. 한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 외교적 이슈들이 빈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양국 정치네트워크의 존재 및 활동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네트워크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한일 양국 지도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갈등적 이슈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며, 축소 지향적으로 현안을 관리해가는 고위급 정치소통채널(pipeline)의 위축 현상은 2012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측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이상득 한국 측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정계에서 은퇴한 후 실질적으로 양국을 이어주는 정치적 네트워크는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 2012년 이후 한일 간 갈등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 수는 없다.¹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존재가 양국 간 갈등적 이슈들을 원천적으로 없애거나 갈등을 자연적으로 상쇄시킬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상들 간 소통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한편, 정치적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을 조망하는 일은 양국의 협력과 갈등의 현장을 네트워크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다시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논문은 한일 간 쟁점과 현안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의 50년을 조망하기보다는, 한일 정치네트워크가 어떻게 부침하였고, 한일 협력과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에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한일 정치네트워크

1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었던 이상득 의원이 정치적으로 실각한 2012년 2월 이후 한일 간에는 점점 갈등이 확산되었다. 2012년 2~4월에 걸친 위안부 문제 협상은 결렬되었고, 2012년 6월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무산되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기점으로 양국 간에는 정치적 소통 없는 갈등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는 갈등의 공극적 해결사 역할보다는 협력의 촉진자(facilitator of cooperation) 내지 갈등의 중재자(arbitrator of conflicts)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의 기능적 강도와 효과가 달랐다. 둘째, 한일 정치네트워크는 냉전 체제하에서 반공이라는 이익을 공유하면서 권력 핵심부 간 의사전달이 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절에 가장 유효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냉전이 완 화되고 민주화가 진전되는 한편, 보스 정치 약화로 정치적 행위자가 다양해 지면서 정치네트워크는 분화 및 중층화의 과정을 거쳤다.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는 갈등조정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셋째, 1980년대까지 정권 핵심세력을 중심으로 한 방사전 형태로 발전해 오던 양국 간 정치네트워크는 1990년대부터 다원적인 병렬형 네트워크로 변형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네트워크는 형해화하고, 세대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한편 권력 핵심부와의 접점이 상실되고 약화된 상태에서 기능부전을 경험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국교정상화 이후 초기에 형성된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친선협회 등 1970년대에 구성된 기관들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초 구성된 한일포럼 등 한일 정치네트워크를 집중 조망함으로써 시대의 변천에 따른 협력과 갈등 양상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조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이원덕,² 박진희,³ 박철희,⁴ 최준영,⁵ 박경민,⁶ 안소영,⁷ 최희식⁸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이들 연구의 기초자료와 시각을 바탕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0년간 한일 간을 이어주는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이 한일 양국의 협력

2 이원덕, 「한일관계에 있어서 의원외교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14집, 2001.

3 박진희, 「한일 국교수립과정에서 '한일인맥'의 형성과 역할」, 『역사문제연구』 제9호, 2003.

4 박철희, 「한일 간 정치네트워크의 변천과 한일정치협력」,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편, 『한일관계의 종합분석: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03.

5 최준영, 「갈등 속의 한일관계와 한일의원연맹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16집 1호, 2008.

6 박경민, 「한일관계와 의원외교: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11. 3).

7 안소영, 「한일관계와 비공식접촉자: 국교정상화 성립 전후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 편, 『박정희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 선인, 2011.

8 최희식,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개」, 『日本研究論叢』 37, 2013; 최희식, 「김영삼 정부 시기 한일 비정부 교류 연구」, 『일본연구논총』 제39호, 2014.

과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한일 간 정치네트워크의 냉전적 출발:

정치인 중심 방사선형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형

한일 국교정상화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적 필요와 한일 양국 간 안보 연계를 통한 대(對)공산권 공동 대응이라는 진영 논리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경제 협력자금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추동하고 시장을 개척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요구가 동인으로 작동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냉전기의 안보 및 경제 연계의 논리는 과거사문제 처리를 봉합한 불완전한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새로운 연계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틀림없다.⁹

1) 점조직 연계로부터 선의 연계로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메모에서 나타나듯이 박정희 정권은 출범 이후 정치적 최측근들을 활용하여 한일 국교정상화 작업을 직접 독려했다.¹⁰ 김종필 총리와 오히라 외상,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 등과의 접촉점은 구 일본군 시대의 인맥을 매개로 할 만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교정상화 초기에는 박정희, 김종필, 박태준 등 쿠데타 주축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연계가 정치네트워크의 핵을 구성하였으며, 이들의 연계는 박정희 정권 동안 연속성을 가졌다. 그 핵심에는 만주(滿洲) 인맥이 강하게 작용했다.¹¹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이시이 미쓰지로(石井光次郎), 야쓰기 가즈오(矢次一夫)를 중심으로 한 일본 내 친

9 이원덕, 「서론」, 『한일 과거사처리의 원점: 일본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0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도성,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도서출판 한송, 1995.

11 이상우, 『제3공화국 외교비사』, 조선일보사, 1985, 109~117쪽; 박진희, 「한일 국교수립과정에서 '한일인맥'의 형성과 역할」, 145쪽.

한파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정계 지도부는 만주와 군부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연계점으로 삼아 개인적 네트워크를 강하게 형성해 나갔다. 이들 초기 정치적 네트워크의 핵심적 인물들은 주로 냉전 상황에서의 반공 논리를 기본적인 연대감의 기초로 삼으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연계 강화에 협력의 초점을 두었다.¹² 1969년 2월 기시와 야쓰기를 중심으로 한 한일협력위원회(韓日協力委員會)의 결성은 한일 양국이 청구권 자금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명목이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간 경제적 연대의 확장을 통해 양국이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출범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일협력위원회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협력 자금의 배분이 종료되는 1975년까지였다는 점이 이를 잘 시사해준다.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제도화도 냉전적 상황의 전개 속에서 가속화되었다. 한일협력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후 ‘한일국회의원간담회’(韓日國會議員懇談會) 등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네트워크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시기는 1968~1969년경이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양국의 정치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1968년은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고전이 가시화된 해이며, 1969년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들에게’라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해였다. 즉,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의 대전환이 공산권에 대응하는 우호국으로서의 한국과 일본의 접근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른바 ‘한국조항’을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고방식이 급속하게 확산되던 시점이기도 하다.¹³ 한일의원연맹의 전신인 한일국회의원간담회도 동아시아에서 위

12 정부차원에서는 1966년 9월 개최된 ‘경제각료회의’가 나중에 ‘한일각료회의’로 발전되었다. 박철휘, 「한일 간 정치적 네트워크의 변천과 한일협력」, 『한일관계의 종합분석: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2003, 33쪽.

13 오키나와 반환과 한국조항에 관해서는 尹德民, 『沖繩返還交渉と韓国外交』, 慶應義塾大学 博士論文, 1991.

기적 상황의 전개를 배경으로 양국 의원들 간의 전략적 소통 강화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국회의원간담회에 참석 중인 의원들에게 한 이야기는 아주 상징적이다. 그는 “만일 한국이 침략을 당하여 적화된다면 일본의 정체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며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어서 반공 결속을 위해 가능한 일부터 노력하여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¹⁴

한일협력위원회와 한일국회의원간담회 결성은 1961년부터 1967~1968년까지 김종필, 박태준 등을 중심으로 한 박정희의 최측근들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 네트워크가 그룹 간 연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1969년은 한일 정치네트워크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점’(點) 조직적 연계로부터 그룹을 중심으로 한 ‘선’(線)의 연계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베트남전의 상황 악화와 미국의 정책 전환이라는 냉전적 상황의 새로운 전개가 한국과 일본의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대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킨 결과였다.

2) 초당적 정치네트워크의 태동

1960년대 말기 출범한 초기 한일 정치네트워크는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재편과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적 변동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1972년 미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 및 일중 간의 접촉은 한편으로는 냉전에서 데탕트(détente)로의 전환을 예고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세력 연대에 대한 한국의 정치지도부와 일본 보수 정객들의 위기감을 공유하게 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두 가지 상반되면서도 동시 진행적인 움직임을 가져왔다. 하나는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 공세와 관련이 있었다. 북한은 냉전 기류에 변화 조짐이 일자 1971년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日朝友好促進議員連盟)을 발족시키면서 북한과 자민당과의 교류 강화를 위한 포석을 깔기 시작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수층의 한일 정치인들이 발족시킨 것이 1972년 ‘한일의원간친회’(韓日議員

14 『조선일보』, 1968. 6. 9(박경민, 「한일관계와 의원외교: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63쪽에서 재인용).

懇親會)였다.¹⁵ 이병희 의원이 앞장서서 일본 정계와 조율 하에 북한과 일본 간 의원외교에 맞서기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선 결과가 바로 ‘한일의원간 친회’의 결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을 계속 부정하면서 사회주의권과의 연대만을 외치던 사회당(社會黨)과는 달리,¹⁶ 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 민사당(民社黨) 세력이 한일의원간담회에 동참하게 된 것이었다. 이는 일본 정치권 내에서 사회당과 민사당이 외교 안보 면에서 더욱 거리를 두면서, 북한을 옹호하던 사회당과는 다른 정책노선을 택하면서 가능하게 된 선택이었다. 가스가 잇코(春日幸)를 정점으로 하는 민사당 의원 30명이 한꺼번에 한일의원간담회에 동참하면서 1975년 한일의원연맹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 계기는 동북아에서도 데탕트의 전개라는 새로운 현실의 도래와 관련되어 있었다.¹⁷ 그 후 공명당(公明黨)도 한일의원연맹에 동참하면서 사회당은 의원외교 면에서 일본 정계 내에서 외톨이가 되어 갔다. 이를 계기로 자민당과 민주공화당 중심의 정치적 네트워크였던 한일의원간담회는 여야당을 아우르는 결사체로서 본격적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1975년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전환점을 이루었다. 하나는 남베트남의 멸망으로 한일 간에 공산주의 세력 확장에 대한 위기감의 공유가 이루어졌고, 민간 차원에서도 연대를 강화하여 공산주의 전선에 대항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1975년은 국교정상화 당시 도입된 경제 협력기금의 소진으로 이른바 청구권 자금에 의존한 한일경제 협력이라는 논리가 약화되면서 새로운 한일 협력의 논리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답하는 것이 1976년에 결성된 한일친선협회(韓日親善協會)였다. 한일친선협회는 풀뿌리 교류, 민간 교류를 국회의원 교류와 마찬가지로 전개해 나가야

15 박경민, 「한일관계와 의원외교: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71쪽.

16 일본 사회당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이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원덕, 『한일 과거사처리의 원점: 일본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222~223쪽.

17 김수환, 「한일친선협회가 걸어온 길: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한일친선협회 공동 펴냄, 『한일 간 풀뿌리 교류와 국가친선』, 제이앤씨, 2013, 15쪽.

한다는 취지하에 발족된 것이었다.¹⁸ 이미 1961년부터 일본에서는 나가사키(長崎)현을 시작으로 친선협회가 결성되기 시작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지방 조직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풀뿌리 교류, 지방 교류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한일친선협회가 탄생되면서였다.

3) 냉전전기 정치네트워크의 강화

냉전시대의 논리가 정치네트워크의 재편으로 연결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였다. 박정희 정권은 주로 일본군이나 일제 강점기의 영향을 받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개인적 네트워크로부터 시작하여 정권 핵심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연대조직으로 협력체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초기의 인맥은 사실상 이승만 정권 말기 야쓰기(矢次)와 유태하 공사 간에 형성된 비공식 정치적 네트워크를 상당 부분 계승한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이 애초부터 친일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1981년 일본 스즈키 젨코(鈴木善幸) 정권에게 이른바 ‘안보분담금’을 내도록 요구한 바 있다. 1981년 4월 22일 이임하는 스노베 료조(須之部量三) 대사에게 노신영 장관이 제기함으로써 공식화하기 시작한 안보분담금 논리는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한국이 동북아 및 일본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이 무임승차하고 있으니 분담금을 내야한다며 10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공식 요구한 것이었다.¹⁹

교착 상태에 있었던 한일 간 차관 공여 교섭은 1982년 1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이 출범하면서 급진전되었다. 나카소네 총리는 미국 방문 이전에 한국 방문의사를 굳히고 측근인 세지마 류조(瀬島龍三)에게 전두환 대통령과 가까운 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과 비공식 비밀 교섭을 하게 했다. 그 결과 1983년 1월 11일 전두환-나카소네 정상회담에서 한일 경

18 김수한, 「한일친선협회가 걸어온 길: 회고와 전망」, 17쪽.

19 박경민, 「한일관계와 의원외교: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96~104쪽.

협 문제는 40억 달러로 최종 타결되었다.²⁰ 세지마는 일본 육사 출신으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통해 당시 삼성 상무였던 권익현을 만났고, 이 인맥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와 접촉했으며, 박태준과도 직접 접촉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 한일 정치네트워크에는 군부 인맥의 입김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¹ 권익현-세지마 라인은 권익현 사무총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게 되고, 세지마가 한일의원연맹 부간사장직을 맡음으로써 한일의원연맹과 병렬적으로, 때로는 중첩적으로 활용되면서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대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한가운데 섰다.

4) 냉전기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특징

냉전기 한일 정치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안보 이해의 공유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경제 협력을 추진하였고, 정권 핵심부 인사들이 한일의원연맹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정점에 서 있었다. 이 시기의 한일 간 정치네트워크는 몇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일 국교정상화 자체가 냉전 시대의 안보 연대와 경제 협력이라는 발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관계로 안보협력과 경제 협력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었고, 양국의 비공식적 정치적 네트워크도 이러한 논리를 반영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나갔다.

둘째, 청구권 자금의 원활한 관리와 경제 협력의 촉진이라는 명목으로 한일협력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냉전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양국 정치인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확대를 위해 한일의원연맹이 구성된 후, 경협이 논리가 약화되면서 풀뿌리 교류와 지방 교류로 확산시키기 위한 한일친선협회가 구성되어 간 것은 순차적 네트워크 형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냉전이라는 상황 하에서 반공 논리를 공유한 가운데 경제 협력의 추진, 그리고 정치적 네트워크의 강화, 나아가 풀뿌리 교류라는 저변의 사회 교류

20 中曾根康弘, 『政治と人生』, 講談社, 1992, 312쪽.

21 瀬島龍三, 『幾山河』, 産経新聞社, 1995, 419~422, 441~442쪽.

로 점차 협력의 중점을 이전시켜 간 것이다.

셋째, 한일협력위원회이든, 한일의원연맹이든, 한일친선협회가든 기본적으로 조직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은 양국의 정치인들이었다. 양국 간 정치적 소통과 친분을 가진 정치인들이 중심에 서고 이 네트워크에 경제인 및 지방의원, 다른 부문 지도자들을 포섭하는 형태로 방사선형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 것이 특징이었다. 방사선 형태의 네트워크 중심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정치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종필, 김수환, 권익현, 김윤환 등 한일의원연맹의 핵심 인사들이 중심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다른 행위자들이 결집하는 형태였다.

넷째,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핵심에 선 정치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권력의 핵심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내각책임제라는 정치체제를 가진 관계로 핵심적 협력 사안의 처리를 위해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의 교류 및 친분이 중요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에서도 정권 핵심부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소통의 쌍방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다섯째, 한국은 냉전기의 대부분을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하에서 보냈다. 또한 국민들의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않았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시기였다. 정치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투명성이나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시기가 아니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 정치네트워크의 중심에 선 정치인들은 국민 여론이나 언론의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비공식적인 회합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냉전적 배경을 안고 출범한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는 점차 개인의 교류보다는 단체 간의 교류로 제도화되면서 정치네트워크의 명맥을 이어갔다.

3.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탈냉전적 적응:

네트워크의 다원화와 병렬화

1) 탈냉전과 민주화가 가져온 정치네트워크의 변화

냉전 종식에 대한 한국의 적응은 매우 민첩했다. 유럽에서 냉전이 종식되기 이전이었던 1980년대 후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사실상 동구권,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선제 대응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정권 시기에 전개된 북방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도 이제까지 한국이 문을 굳게 닫고 있던 공산권, 사회주의권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냉전 상황의 타개를 이끌어나가는 형국이었다.²² 1990년 소련 및 199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는 한국의 외교 지평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외교적 선택지를 한층 더 넓혀주었다. 아울러 추진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후일 대북 포용정책의 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북방정책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대결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가지면서도 사실상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한국의 우위로 끝났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한일 간 정치적 네트워크에 본질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 가네마루(金丸信)가 이끄는 방북단에서 나타나듯이, 1990년대 상당 기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²³ 한국은 일본의 급속한 대북 접촉을 경계하기도 했지만, 북일 관계 개선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위한 한일 간 연합이라는 정치네트워크의 일면을 약화시켰다. 또한 사회주의권 전체에 대한 대항축의 형성이라는 냉전기 안보 연합 논리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물론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냉전적 논리가 완전히 사라진

22 박철희, 「노태우 시대의 대전략과 우방국 외교: 대미, 대일관계」, 강원택 편,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전환기의 한국사회』, 나남, 2012, 269쪽.

23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년』, 도서출판 오름, 2004, 221~230쪽.

것은 아니었다.

냉전 종식보다 한일 정치네트워크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한국의 민주화였다. 한국이 경제성장에 이어 민주화를 달성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동아시아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새롭게 했다.²⁴ 한일 관계가 원조 국가와 피원조 국가라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대칭적 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었다.²⁵ 이후 한국과 일본은 양자 협력에 더하여,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이 정착하게 되었다. 1991년 1월 발표된 ‘한일 우호협력 3원칙’은 “한일 양국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 협력과 상호 이해의 증진,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화해 그리고 번영과 개발을 위한 공헌의 강화, 세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관여”로 구성되었다. 이는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조된 새로운 협력 원칙이었다.²⁶

2) 지적 교류네트워크의 시발: 한일포럼과 한일공동연구

그런데 안보 협력을 넘어서는 중층적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적 네트워크와는 다른, 새로운 인물과 비전이 필요했다. 1993년 11월 김영삼-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으로 새롭게 구성된 ‘한일포럼’은 탈냉전으로 인한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 한국의 문민정부 출범과 일본의 비자민(非自民) 연립내각의 출범 등 국내정치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의제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것이다.²⁷ 실제로 한일포럼은 1995년 제주 성명에서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 한일 비자 면제 추진, 한일 대중문화 개방, 역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나중에 실현된 굵직굵직하면서도 구체적인 협력 어젠다들을 제시하여 주목 받았다.

한일포럼은 탈냉전기 상황에 적응하여 구성된 새로운 정치네트워크였

24 오코노기 마사오, 「체제 마찰에서 의식 공유로」, 현대일본학회 편, 『21세기 한일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비전』, 한울아카데미, 2007.

25 최희식, 「김영삼 정부 시기 한일 비정부 교류 연구」, 8쪽.

26 『동아일보』, 1991. 1. 10; 최희식, 「김영삼 정부 시기 한일 비정부 교류 연구」, 8쪽에서 재인용.

27 최희식, 「김영삼 정부 시기 한일 비정부 교류 연구」, 12쪽.

다. 한일포럼은 냉전기에 출범한 다른 정치네트워크들과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먼저, 안보나 경제 현안 등 사안별 협력 의제에 국한하지 않는 포괄적 협력 의제 창출 역할에 집중했다.²⁸ 둘째, 과거사와 관련된 안건들을 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일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셋째, 유력 정치인들이 멤버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적 교류의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넷째, 유력 인사들의 발언 청취나 지방 시찰 등 의례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실무적인 의제 협의에 충실했다. 다섯째, 멤버 구성에서 다원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한편, 노장청(老長靑)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세대가 치우치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일포럼은 탈냉전기 한국과 일본의 위상과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다층적, 다원적 협력의 네트워크로 자리 잡아갔다.

한국과 일본이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군사 및 안보,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협력 어젠다들을 모색하기 위한 지적인 공동 모색의 필요성이 강해졌다. 이를 반영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의 형태가 역시 김영삼-호소카와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출범한 ‘한일공동연구’(韓日共同研究)였다. 고려대 최상룡 교수와 게이오대학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교수가 양측 대표로 나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한일문화교류기금의 지원을 받으며 진행된 ‘한일공동연구’는 정치, 외교, 경제, 역사, 문화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인식공동체’ 창출의 장이 되었다.²⁹ 한일공동연구는 정치적 현안을 토의하고 해결하는 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양국 주류 지식인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양국이 직면한 각종 문제들에 대해 공유된 인식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한일공동연구

28 최희식, 「김영삼 정부 시기 한일 비정부 교류 연구」, 20쪽.

29 ‘한일공동연구’는 1994년 8월 31일 무라야마 수상이 ‘평화우호교류계획’ 구상을 제시한 후인 1995년 일한문화교류기금을 매개로 오코노기 교수와 최상룡 교수 간에 ‘한일플라자’라는 가칭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박철희, 「한일 간 정치적 네트워크의 변천과 한일협력」, 38쪽.

구는 한국과 일본이 정치 및 군사 부문에서의 협력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 역사 등 제 부문에 걸쳐서 대등한 지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장이기도 했다. 아울러, 협력의 행위자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다양화된 정치 참여자 및 지식인들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에 국한하지 않는 다층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1998년 10월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고, 그 이후 조성된 양국 간 우호 협력분위기를 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고양시킨다는 차원에서, 199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기로 합의하고, 그 해 6월 양국 대표 11명으로 구성된 ‘한일문화교류회의’를 발족했다.³⁰ 이 기구는 한일 양국 간의 문화·예술 분야 인사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양국 네트워크의 지평을 문화계로까지 확장한 데 의미가 있다.

물론 한일포럼의 등장이나 한일공동연구의 출범이 한일의원연맹이나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친선협회와 같은 전통적 정치네트워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정치네트워크들은 탈냉전과 민주화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에 접하면서 한일 간 인식의 갭을 매우면서 비협력적 요인을 제거하는 일에 꾸준히 진력했다.

3) 역사화해 시도, 신보수세력의 반동, 그리고 한일역사공동연구

탈냉전기 도래 이후 한일 간의 대등하고 다차원적인 협력의 모색을 가능하게 했던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은 기존의 정치네트워크를 활용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아시아에서의 대등한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역사 화해 움직임들은

30 한일문화교류회의 홈페이지 참조. <http://www.kjcec.or.kr/kjcec/introduction.html> (최종 검색일: 2015. 1. 17).

한일 간 가치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1992년 미야자와 담화(宮沢談話), 1993년 고노담화(河野談話), 1995년 무라야마담화(村山談話)에 이르는 연속적인 역사 화해 조치는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정치적 디딤돌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실제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2~1995년에 이르는 일본 측의 사죄 표명 및 과거사 반성이라는 일본의 전향적 조치를 발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³¹

그러나 일본 정계 내부에서는 자민당 내 리버럴한 정치세력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역사 반성 및 아시아와의 화해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보수 강경파 또는 신보수(新保守) 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³² 이들은 자민당(自民黨)-사회당(社会党)-신당 사키가케(新党 さきがけ)의 협력에 의해 주도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화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표명하기 시작했다.³³ 보수 강경파들은 사회당의 지지 기반인 일교조(日教組)가 공유하던 역사인식을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고 해석하고, 일본인들에게 ‘자공사관’(自矜史觀)을 심어주어야 한다며, 사죄 및 반성 외교에 대한 반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역사교과서 새로 만들기 등,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과거사 직시와 반성’이라는 논리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비협력적, 반협력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안보 협력의 논리에 충실했던 냉전기 보수 세력과 달리,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재정의론을 주장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은 기존 한일 정치네트워크에 새로운 충격과 파장을 안겨주었다.

한일의원연맹 등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중심에 선 단체들은 협력의 증진이라는 기존의 역할 이외에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위기관리와 조정’이라는 역할을 떠안게 되었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문제발언이나 망언이 있을 때마다 한일의원연맹의 중책을 맡은 정치인들은 수시로 왕래하고 의사소통

31 유상영 외, 『김대중과 한일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32 박철희, 「일본 정계에서의 신보수주의 세력의 성장과 한국에의 함의」, 김영작·전진호 편, 『글로벌화 시대의 일본: 한국에의 함의』, 한울, 2006, 96~100쪽.

33 박철희, 『자민당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270~285쪽.

하면서 양국 간 인식의 갭을 메우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면 아래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민당 내부에 강경한 신보수 세력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의원연맹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나카소네(中曾根),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오부치, 모리(森) 등이 자민당 내 유력 파벌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가 전면에 등장하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치적 소통과 조정을 통한 갈등의 해결이 가능했다.³⁴ 망언을 한 일본 정치인의 파면이나 공식 사죄 내지는 주요 보직으로부터의 면직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³⁵

한일의원연맹 등 중추적 정치네트워크가 수면 아래에서 비공식적 조정을 통한 갈등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한편, 양국 정부는 제3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회적 협력도 도모하게 된다. 1995~1997년을 즈음하여 한일 양국 간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자, 양국 정부는 한일문화교류기금을 매개로 하여 우선 1997~1999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일역사연구촉진공동위원회’(韓日歴史研究促進共同委員會)를 구성하고 ‘한일역사포럼’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학자들의 영역으로 돌려 억제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역사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양국은 다시 2002년부터 ‘한일역사공동연구’(韓日歴史共同研究)팀을 구성하여 양국 간 역사인식의 공유를 지향하는 동시에, 대결적 인식의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이들 지적 네트워크들은 정치네트워크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나, 양국 협력의 장애가 되는 역사 문제를 학문의 영역으로 제한함으로써 갈등적 이슈가 대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다른 한편으로, 한일 양국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표명한 일본 대중 문화 개방을 전격 단행함으로써 대중의 인식 전환과 상호 풀뿌리 교류 확산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안정화시키려 했다. 1999년

34 2001년 3월 8일 김종필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정부 특사 자격으로 모리 총리를 만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교과서의 검정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김종필 특사의 방문 이후 교과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한국일보』, 2001. 3. 8.

35 1995년 10월 11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당시 총무상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라고 발언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반발하자 11월 13일 무라야마 수상은 그를 경질했다. 『연합뉴스』, 1995. 11. 13.

부터 가동한 ‘한일문화교류회의’(韓日文化交流會議)는 비정치적 어젠다를 통해 상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려는 적극적 화해 조치의 일환이었다.

4) 탈냉전기 정치네트워크의 특징

이와 같이 탈냉전과 민주화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에 적응하여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탈냉전기 정치네트워크의 전환과 적응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공산권과 반공의 진영 논리에 입각한 협력을 진작하기보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전면에 내세운 가치공동체의 창출을 목표로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자, 지역, 세계라는 세 차원의 구도 속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전개되었다.

둘째, 여전히 정치인들이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기는 했지만 학자, 언론인, 문화인들을 포괄하는 지적 교류로서의 장이 다양하게 설정되었다. 한일 관계를 규정하고 새로운 이슈를 찾아내는 행위자가 정치인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차원적, 다원적 협력을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었다.

셋째, 정치인들이 네트워크의 핵심에 서고 다른 네트워크들이 방사선 형태로 이어지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정치인들의 네트워크와 지식인 네트워크, 문화인 네트워크, 언론인 네트워크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다층적 네트워크 시대가 열렸다. 한 행위자나 집단이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주의적 시대가 종식되었다는 것을 한일 정치네트워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협력 지향적 네트워크의 확장 및 다층화 이면에서 한일 간 화해와 협력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는 비협력적, 갈등 조장적인 사회 세력 및 정치 세력이 등장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양상이었다. 이들은 기존의 정치네트워크에 소속하지 않거나 혹은 소속한다고 해도 기존의 멤버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내부의 분열적 양

상을 예고했다.

4. 동아시아의 세력 전환, 국내 정치 구조의 전환과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부적응

1) 동아시아의 이중적 세력 전환과 정치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전환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시장의 전면적 개방, 기업의 글로벌화 및 무역통상을 통한 발전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일본이 국내 공공수요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전통적 전략을 구사한 것과 대별되는 전략이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성장으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 전략은 일본을 학습하면서 추격하던 모델로부터의 상대적 이탈을 의미했다.³⁶ 국제화 전략의 성공은 한국과 일본의 힘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축소시켰다.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일본에 의존적이고 추종하는 전략으로부터 이탈을 의미하는 동시에, 수직적 분업에 의존하던 한일 양국 경제 협력 관계가 상대적 균등화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했다.³⁷ 한일 양국 간 힘의 상대적 균등화는 민주화 이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 증대와 맞물려 들어가면서 양국을 이어주었던 경제 협력의 논리에 변화를 가져왔다. 수직적 분업의 논리에서 벗어나 점차 수평적 경쟁 논리가 팽배해지면서, 한국은 일본과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거래와 조정을 넘어 공식적 채널을 통한 수평적 협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려는 방식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한국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에 선 것은 물론, 북한의 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 독자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

36 손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수렴과 상이의 동학」, 현대일본학회 연례 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2. 11. 24.

37 기미야 다다시, 「한일관계의 역학과 전망: 냉전기의 다이내미즘과 탈냉전기에서의 구조변용」, 김영작·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한울, 2006, 385쪽.

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증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을 넘어서 지역 및 국제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즉 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한 간의 협상을 넘어서는 국제 안보 과제로 부각되면서 6자 회담 등 지역 이해 관계국들을 포괄하는 협상의 무대로 이전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의 증대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통상 전력을 통한 한국에 대한 직접 위협은 줄어든 것으로 인식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왔다. 국방비에서는 물론, 경제력 차이를 실감하게 해준 것은 북한 체제의 강압적 통치와 불안정성 증대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이탈하는 탈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이었다.³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일 안보체제만을 강화하기보다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논의가 표면화되었다. 실패 국가로 전략한 북한 체제를 고립시키기 위한 압력과 제재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동시에 형성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안보 협상의 국제화, 북한 체제에 대한 압력과 제재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은 한국의 절대적 안보 협력국으로부터 상대적 안보 협력국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의 존재감이 확대되었다. 즉 일본과의 안보 협력 논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삼각 연대를 통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단선적 구조로부터 미, 일, 중, 러 등 6자회담 당사국들 및 유엔 등 국제조직을 통한 다자적 대응 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한일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직접적으로 제휴해야 한다는 논리를 상대화시킴으로써 한일 안보 협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반공이라는 안보 협력에 기초를 두었던 기존의 한일 정치네트워크도 상대화되는 구조적 변환을 가져왔다.

38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 10명 내외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2002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1000명에 이르렀고, 2006년에는 2000명을 넘어섰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총 2만 6124명에 달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 문제의 이해』, 통일교육원, 2014, 216~217쪽.

경제 협력 논리의 약화, 안보 협력의 상대화와 더불어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변동이었다. 냉전 시대 한중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갈등하더라도 결국에는 일본과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는 ‘불편한 회귀’(uncomfortable return)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일본 과거사 문제 제기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진영에 서야 했고 외부적으로 제휴할 국가가 부재했던 관계로 과거사 갈등은 불완전 연소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중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한일 간에 과거사와 관련된 갈등이 불거지면 한중 양국이 잠재적 또는 직접적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게 되었다.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한중 대 일본의 구도가 형성되는 구조가 정착되어 갔다. 그 결과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한일 양국 간의 갇힌 외교 공간 속에서만 다루어지지 않고, 한중일 관계에 파급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일 양자 간 비공식적 접촉에 의한 갈등 수위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한일 정치네트워크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점차 줄어들었다.

2) 국내 정치 구조 전환과 네트워크 공급 요인의 전환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일본에서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양국의 정치 상황 변화도 한일 양국을 이어주는 정치네트워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2002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정치적 변환은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현저한 약화를 가져왔다.

우선 2000년대 초반 이후 한일 양국에서 ‘보스 정치’(boss politics)가 약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386세대의 전면 등장이 말해주듯이, 3김 시대 정치와 달리 한 정치인의 카리스마적 지도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세력으로서의 정치, 이념으로서의 정치가 일상화되었다.³⁹ 정치

39 강원택,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2003, 9장, 11장; Cheol Hee Park, “Depersonalized but Disaffected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in Japanese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ed., *Governmental Changes and Party Political*

스타일 면에서도 기존의 정치적 소통 방식과 관례를 무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와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국회 내에서의 추종 세력과 지지 세력은 있었지만, 정치적 생사여탈권을 거머쥐고 있던 이전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도 대중적 인기는 매우 높았지만, 기존의 당 내 파벌과 자민당 지지 공동체를 서슴없이 파괴하는 언행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인들 간의 조직적 결속력은 약화되었다. 고이즈미는 리더였지만 그룹의 보스는 아니었다.⁴⁰ 양국 정치 세력의 재편은 파벌의 영수나 카리스마적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소수 정치인들 간의 비공식적 연계를 통한 갈등 해결이라는 종전 방식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양국의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설득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일상화되기 시작한 것이다.⁴¹

이와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이 한일 정치권 내에서의 급격한 ‘세대교체’였다. 한국에서는 3김이 정치적으로 퇴진한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신들이나 비서그룹이 아닌 학생운동권 출신이나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정치권에 진입했다. 구세대의 퇴장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세대의 후퇴를 의미하기도 했다. 과거 한일의원연맹이 비공식적 소통에 강했던 것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세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사소통 수단이 다른 새로운 정치적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고이즈미라는 대중적 지도자 등장 이후 일본 정계에서는 ‘고이즈미 칠드런’(Koizumi Children), ‘오자와 칠드런’(Ozawa Children), ‘아베 칠드런’(Abe Children)이라고 명명되는 초선, 재선 의원들이 다수 등장하고 또 사라졌다. 이는 보스 정치에 익숙했던 전통적 정치인들의 후퇴를 의미하는 동시에, 일본 국회 내에서 안정적 지위를 차지

Dynamics in Korea and Japan, Tokyo: Bokutakusha, 2012, pp. 236~238.

- 40 일본 언론은 고이즈미 수상을 종종 ‘괴짜’[変人] 또는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一匹狼]라고 불렀다.
- 41 2011년 8월 초, 독도 문제의 실상을 알기 위한 명목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던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의 계획을 안 한일의원연맹 회장 모리(森) 전 총리가 그를 불러 재고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을 나섰다는 일화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설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하고 있던 중진 의원들의 퇴조를 의미했다. 한국에 대한 회한과 연민을 가진 중진 정치인들과 달리, ‘전후(戰後) 세대’로 불리는 신세대 정치인들은 전전(戰前)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지식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1955년 체제 하에서 안보 논리를 중심으로 이념적, 냉전적 대결을 한 경험이 거의 없다. 그 결과 한국을 특별한 국가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대등한 경쟁자 내지 협력자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냉전의 논리와 과거사의 짐을 알고 있는 세대들에 비하면 이들은 ‘신인류’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닌 새로운 세대들이다. 과거의 인식과 경험, 그리고 소통 수단을 공유하지 않는 데다, 정치 무대에서 당락의 빈도가 증가한 세대가 다수 포함된 상태에서 지속가능한(sustainable) 한일 간 정치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되었다.

민주화 및 사회 다원화와 더불어 새로운 시민사회 세력이 전면에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 우파적 시민세력이 결집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강화되면서 정치인들의 자유로운 입장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일본 정계 내에서도 보수 리버럴의 타협적 논리에 저항하는 ‘신보수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한일 간 과거사 쟁점에 대해 타협을 거부하고 오히려 갈등을 선동하고 확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⁴² 이들 대부분은 기존 한일 정치네트워크에 가담하지 않거나 소속이더라도 소극적이고 상징적 참여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한일 정치네트워크를 통한 갈등 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한국 내에서도 과거사 현안에 관여하는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역할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나 정치인들이 시민사회의 논리에 포획(capture)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정치권이 양국 간 갈등을 잠재우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가시화, 전면화에 일조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⁴³ 이는 기존 정치

42 박철희, 「일본 정계에서의 신보수주의 세력의 성장과 한국에의 함의」.

43 예를 들어 한국 국회 내에 2013년 설치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일 갈등의 파고를 조절하기 보다는 갈등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이보다 앞서 2011년 자민당

네트워크에 대한 반작용 내지 반동(backlash)이라는 성격이 강해 자국 내에서 의견 수렴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⁴⁴

3) 비공식적 협상의 한계

비공식적 접촉과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언론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전환이다. 정보화 혁명 및 SNS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는 편집자들과의 의기투합을 통한 뉴스의 삽입 및 배제가 어렵게 되었다. 편집과 숙론을 거치지 않는 무차별적, 동시다발적 뉴스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언론 환경은 비공식적 논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 해결과 조정은 이슈의 공론화를 방지하고 수면 아래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명한 설명 책임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공식적 행위자인 정부의 언행이 훨씬 중요성을 띠는 ‘갈등 조정 채널의 공식화’ 현상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언론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활용하는 조직된 시민사회 세력의 영향력 강화도 정치네트워크의 효용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조직되지 않은 다수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잘 조직된 시민사회 세력이 특정한 이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면 이들의 논리에 안전이 포획(capture)되는 양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갈등적 현안에 대한 적극적 발언자가 양국 간 대결적 양상을 벌일 때, 한일 양국 내 민족주의적 시민사회 세력은 상대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적대적이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이유로 공존하는 ‘적대적 공존’(antagonistic coexistence)이 이루어지는 아이러니컬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세력 전환기에 접어들어 정치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요인 변화, 공급 구조의 전환,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 환경의 변화는 한일

내에 설치된 ‘영토에관한특명위원회’도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44 국내 정치 세력의 반동(backlash)에 대한 논의는 Jennifer Lind,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정치네트워크의 질적인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한일 정치네트워크가 협력의 촉진자 및 갈등의 조정자로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4) 기존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적응 노력과 부적응 구조

한일 정치네트워크에 대한 수요와 공급 요인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한일 정치네트워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강화되었다.

우선, 한일의원연맹은 세대교체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젊은 정치 세력을 포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맹 내에 ‘21세기위원회’를 새로 조직하여 차세대 비전을 만들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1세기위원회에는 비교적 젊고 참신한 정치인들을 배치시켜 교류를 정례화하고 있다. 2014년에는 비공식적으로 전개해오던 여성의원들 간의 교류를 ‘여성위원회’로 새로 발족시켜 공식 조직으로 편입하는 노력도 기울였다.⁴⁵ 한일의원연맹에 자문교수단을 두고 수시로 전문가적 식견을 활용하는 것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한일협력위원회도 단지 회원들만의 조직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인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2009~2012년 정권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 및 여당 내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명당 의원들도 교류의 장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은 다원화하는 정치 세력을 포괄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⁴⁷ 아울러, 한일협력위원회는 언론인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여 ‘한국 언론인 일본 방문단’을 만들어 일본의 지도자 및 여론 주도층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45 나경원 의원은 재선 의원이던 2010년 당시 일본 여성의원들과 모임을 만들었으나, 그 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하면서 호지부지되었다. 2012년 다시 국회에 입성한 나경원 의원은 여성의원 모임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으나, 한일의원연맹이 나 의원을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여성의원 모임을 조직 내로 끌어들었다.

46 이상득 회장 당시 한일의원연맹은 윤덕민, 박철휘 교수를, 황우여 회장 당시에는 장달중, 진창수, 윤덕민, 박철휘 교수를 자문교수단으로 임명했다.

47 2014년 11월 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협력위원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는 센고쿠(仙谷) 전 관방장관, 에다노(枝野) 전 관방장관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교류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⁴⁸

한일포럼은 다른 정치네트워크보다 세대교체 및 세대 간 융합에 적극적이다. 2014년 대표 간사를 50대 초반으로 교체한 것은 세대교체를 이루려는 의식적 노력의 결과였다.⁴⁹ 포럼 참가자들을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로 다양한 범주의 직능 집단이 대표되도록 배려하는 한편, 청장년층들이 주력을 이루게 하는 배려를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기존 한일 정치네트워크들은 또한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공공의교와 관련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한일협력위원회와 한일친선협회는 거의 매년 공개 세미나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양국 간 갈등적 쟁점에 대한 합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⁵⁰ 전문가들을 초빙한 강연 및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일협력위원회는 기존에 발행하던 잡지인 『한일협력』에 여론 주도층을 기고자로 참여시키고 잡지를 대량 배포함으로써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사회에 널리 환기시키고 있다.⁵¹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 네트워크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정치사회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 부적응의 현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기존 정치네트워크들이 고령화하고 있다. 특히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는 멤버들의 고령화 정도가 아주 높다.⁵² 이는 조직

48 한일협력위원회는 2014년 7월 중순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등 10명을 일본에 초빙하여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및 지식인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아베 일본 총리는 7월 17일 이들을 40분간 만났다. 『연합 뉴스』, 2014. 7. 17.

49 한일포럼은 2014년 9월 운영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대표간사를 맡아온 정구종 전 『동아닷컴』 사장 대신 박철희 서울대 교수를 대표간사로 임명하고 장제국 동서대 총장을 간사로 위촉했다.

50 한일친선협회는 2013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일친선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한일협력위원회는 2012년, 2013년, 2014년에 동서대 일본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51 한일협력위원회는 계간지인 『한일협력』을 발행하고 있다.

52 한일협력위원회 한 멤버는 2014년 사석에서 필자에게 “내가 70대 초반인데 이 모임에 오면 찻잔을 날라야 한다”라는 농담어린 어조로 조직의 고령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의 수장을 전직 국회의장과 전직 국무총리가 맡기로 한 양국의 암묵적 관례에 따라 적절한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지 못한 점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멤버들도 수장들과의 친분 관계에 의존한 충원이 많았던 관계로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네트워크의 지도부는 여전히 고령화된 세대에 정체되어 있어 ‘세대 간 소통의 부적응(mismatch)’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네트워크가 정치지도자들의 위임을 받아 양국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보다는, 정례화된 조직이나 기구로서의 정당성 확인에 집중하는 형해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기존 네트워크들이 양국 내에서 정권 핵심 세력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적 연계의 괴리’로 인해 네트워크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권 핵심부와의 소통 부재 내지 부족으로 인해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국적 합의와 타결을 도모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보이던 정권 핵심 세력 간 연계 고리라는 성격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이다. 그 결과 양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경우 정권 내부 핵심부 세력 간에는 거의 소통 채널이 부재한 상태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정치네트워크를 통해 양국 관계를 조정하고자하는 정권 핵심부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주변(periphery) 조직’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셋째, 한일 정치네트워크의 경쟁적 활동 전개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정계를 대표하는 한일의원연맹, 재계와의 연결고리라는 성격을 지니는 한일협력위원회, 지방과 청소년 교류에 집중하는 한일친선협회, 여론 주도층의 합의체인 한일포럼 등이 독자적 정체성을 견지하고 있지만, 참여하고 자문하는 멤버들이 중첩되고 주로 한일 관계에 관련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즉, 기존의 정치네트워크들은 양국 사회 엘리트의 ‘대표성의 포괄성’(inclusiveness)은 약한 반면, 폐쇄성(exclusiveness)이 강한 편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네트워크의 ‘복합 골절’은 치유 가능한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의 50년을 돌아보면, 수교 직후부터 한일 간 정치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양국 정권 핵심부와 연계되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네트워크들은 양국 간 갈등적 이슈들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이 민주화한 이후에도 양국은 한일포럼 등 새로운 협력 단위를 발족시키면서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정치네트워크들은 변화된 국제정치, 국내정치 상황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기능부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일 정치네트워크는 현재 ‘복합 골절’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³ 하지만 이는 기존 조직 구성원들의 탓으로만 환원시킬 수 없는 문제들이다. 양국 간 관계가 균등화되고, 국제정치 환경이 변화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였고, 양국 내 정치구조의 변화와 세대교체에 따라 공급 구조도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기존의 한일 네트워크가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흑독한 평가다. 또한 이 조직들이 수행해온 역할과 현재 진행 중인 협력 사업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협력을 보다 진작시키기 위해 위에서 지적한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네트워크 구성원의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정치네트워크란 그 성격상 양국의 엘리트들이 전면에 포진되어야 하는 관계로 중장년층이 대표를 이루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양국의 급속한 고령화도 중장년의 활동을 당연하게 만든다. 하지만 고령화된 조직에 활

53 오코노기 교수는 송호근 교수와의 특별대담에서 2014년의 한일관계는 하나만 고쳐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복합골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중앙일보』, 2014. 5. 2.

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세대 간 대표의 균형’(generational balance)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례화된 외교 활동의 주변 조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환 또는 정권 핵심부 인사를 포괄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 간 소통을 간접적으로 원활하게 하는 대화의 촉진자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치네트워크 참가자들의 포괄성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행위자들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조직적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세기의 변화된 국제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한일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변화된 국제 환경, 지역 환경에서도 왜 양국이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한, 소통 채널의 확보만으로 갈등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다.

ILBI: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2, 2015

CONTENTS

4 **Editor's Note** NAM Ki Jeong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EVOLUTIO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 26 A New Paradigm of Korea-Japan Rela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Reconcil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CHUN Ja Hyun
- 50 Early Stage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NISHINO Junya
- 72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After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 South Korean Agreement YOO Hyuck Soo
- 102 50 Years after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CHO Youn Soo
- 134 South Korea's Diplomacy and the Evolution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 PARK Young June
- 168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Policy Idea and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Competitive Dependence in Political Perspective YOON Dae Yeob
- 196 Cooperation and Conflict seen from the Rise and Fall of Bilateral
Political Network PARK Cheol Hee
- 224 Realizing and Overcoming the Double Mission:
A Short History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NAM Ki Jeong
- 264 Retrospect of Korean Students Studying in Japan after the 1945 Liberation KIM Young Jak
- 290 Understanding Japanese Local Politics through Gender Analysis SHIN Ki Young

RESEARCH NOTE

- 308 Power Shifts and Japanese Bureaucracy: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cy and Power Shift during the Two Power Shifts SHINDO Muneyuki

ARTICLES

- 328 Cross-Boundary, Cross-Lingual and Cross-National Writings of Yoko Tawada CHOI Yun Young

일본비평
관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015 상반기, 제12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발행일 2015년 2월 15일 | **발행인 겸 편집인** 박철희 | **편집위원장** 박규태 | **편집간사** 이은경

편집위원 강대웅, 권숙인, 김봉진, 김효진, 남기정, 목수현, 박진우, 신기영, 양일모, 원지연, 유혁수, 윤상인, 이은경, 이지원, 이지형,
임성모, 장인성, 정진성, 조관자, 최영호, 황성빈

발행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전화** 02) 880-8503 | **팩스** 02) 874-3689

제작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화** 02) 880-5220

ISSN 2092-6863 Copyright © 2015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에 실린 글은 일본연구소 홈페이지(ijs.snu.ac.kr) 및 디비피아(www.dbpia.co.kr) 등에서 보실 수 있으며 구입,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로 연락 바랍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일본비평」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NRF-2008-362-B00006).

차례

4 편집자의 말

한일 국교정상화 50년: 갈등과 협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남기정

특집: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

26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천자현
50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니시노 준야
72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유혁수
102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확정 50년	조윤수
134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	박영준
168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윤대엽
196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박철희
224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 '이중과제'의 인식과 극복의 여정	남기정
264	특별기고 해방 후 1세대 일본 유학생의 회고	김영작
290	특별서평 젠더 분석을 통한 일본의 지방정치 읽기	신기영

연구노트

308	정권 교체와 일본 관료제: 두 번의 정권 교체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와의 관계	신도 무네유키
-----	--	---------

연구논단

328	다와다 요코의 탈경계적, 탈민족적, 탈문화적 글쓰기	최윤영
-----	------------------------------	-----

356	참고문헌
366	국문초록
371	영문초록